

<https://doi.org/10.22924/jhss.29.2.202108.005>

『인문사회과학 연구』 제29권 제2호

(2021, 08): 112-142

군사작전과 민간인 피해 관련 연구: 6.25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중심으로

윤원규 (여주대학교/교수/wkyoon1@hanmail.net)

국문 초록

- 연구 주제: 6.25 전쟁 시 한반도가 공산화 위기에 처했을 시 한국군을 기사 회생시킨 작전이 인천상륙작전이다. 지금까지 인천상륙작전의 성과에 치우쳐 상륙작전에 따른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인천상륙작전을 중심으로 군사작전에 따른 민간인 피해현황과 재발방지책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 연구 배경: 역사적으로 현대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성과와 의미는 대단하다. 지금까지 인천상륙작전의 성과에 치우쳐 민간인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모르거나 관심이 소홀했음에 반성과 함께 6.25전쟁 시 인천지역에서 실시된 2차례의 상륙작전을 분석하고, 상륙작전과 관련한 민간인의 피해를 분석하여 피해원인 및 재발방지책을 찾고자 하였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6.25 전쟁 시 발생한 민간인 피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많은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이라는 한 지역의 특정 군사작전에 관련된 민간인 피해와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 관련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고의 연구결과가 민간인 피해현황의 모드를 밝히고 피해재발방지책을 완벽하게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상륙작전 시 발생한 민간인 피해 및 이에 대한 방지책 연구로는 첫 시도이다.
- 연구방법: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한 군사자료와 민간인 피해 관련한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현황을 종합, 분석하였으며, 전 시 민간인 피해재발방지 대책을 연구하였다.

- 연구결과: 전시 민간인 피해 관련하여 피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한 진솔한 반성이 필요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신상필벌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며, 특히 평시부터 대민작전 전문 민사부대를 편성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작전에 투입하여야 한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인천상륙작전 시 발생한 민간인 피해현황의 모두를 밝히지는 못하였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피해현황을 바탕으로 피해방지대책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첫걸음으로 전시 민간인피해 관련 많은 연구와 재발방지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주제어: 전쟁, 6.25전쟁, 인천, 인천상륙작전, 민사작전, 민간인피해, 인권.

I. 서 론

대한민국은 해방 후 4년여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동족 간의 전쟁이자 국제전인 6.25전쟁을 겪게 되었다. 6.25전쟁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인명손실은 한국군 전사 13만 7천여 명을 포함한 62만 1천여 명, 유엔군 전사 4만여 명을 포함한 15만 4천여 명이 전사·상하거나 실종되었다(양영조, 2005: 144). 군사정전위 편람에 의하면 적대국인 북한군도 사망 52만여 명을 포함한 약 64만여 명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중공군도 사망 14만 8천명을 포함한 약 97만 2천여 명이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국방군사연구소, 1996: 144-145).

6.25전쟁은 준비된 일방의 기습으로 인해 발생된 전쟁이었으므로 전쟁초기의 전황은 북한 측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전개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전쟁 3일 만인 6월 28일 수도서울을 점령하였고, 전쟁발발 3개월도 안된 8월초에는 남한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여 한반도 공산화가 임박한 듯 보였다. 당시 6.25전쟁의 상황은 전쟁 초기 북한 측의 강력한 전력에 밀려 한국군은 풍전등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 때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전환점이 된 역사적인 작전이 ‘인천상륙작전’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를 살펴보면 남한 측의 유엔군이 인천상륙을 통해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낙

동강방어선에서 유엔군의 반격의 계기를 조성해 주었다는 점이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국군 및 유엔군은 물론 국민들의 사기를 크게 제고시키고 북한군의 사기를 급격히 떨어뜨리게 하였다는 점이다.

6.25전쟁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2년간 피아가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다 1953년 7월 27일 3년여 기간 동안의 막대한 피해를 안고 상호간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전투원 민간인의 피해인데 통계에 의하면 민간인 사망 24만 4천여 명, 학살 12만 8천여 명, 부상 22만 9천여 명, 납치 8만 4천여 명, 행불 30여만 명 등 총 99만여 명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내무부통계국, 1955: 212-213).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전쟁의 대전환점인 인천상륙작전 시 발생한 민간인 피해이다. 본고가 인천상륙작전에 대하여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인천상륙작전이 6.25전쟁 중 벌어진 전투 중 큰 전환점이 된 대표적인 작전이기도 하지만 인천상륙작전은 상륙작전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상륙작전의 대표적인 특성은 타 작전은 적군이 있는 전선에서 전투를 하는데 반해 상륙작전은 적과의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 즉 적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작전이다. 따라서 타 작전에 비해 상륙작전으로 인한 군인들의 피해도 크지만 민간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특성이 있어 인천상륙작전 관련 민간인피해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는 미군폭격으로 인한 피해만 보아도 월미도 주민 1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되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10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미도 실항민들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부와 인천시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미 공동조사 및 공동책임 등의 문제와 국방부와의 협의 등 복잡한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한겨레신문, 2016). 또한 인천지역에서의 민간인 피해는 행정안전부 진실화해위원회의 1차 조사에 이어 2기 조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분단국 3개국 중 한 국가로 남아있으며, 남북 간에는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에 있다. 이에 정부와 군은 매년 전쟁대비 훈련인 한미연합훈련과 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대응과 보복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로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을 예방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발생할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구하여야 한다.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피할 수 없지만 전

쟁대비가 없는 민간인의 피해는 줄여야 하며, 특히 아군에 의한 피해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6.25전쟁 관련 연구를 확인한 결과는 지금까지 주로 안보·군사 분야의 분석과 교훈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6.25전쟁 관련하여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과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잘한 것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과거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어 분석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본고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과에 치우쳐 민간인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모르거나 관심이 소홀했다는 반성과 함께 6.25전쟁 시 인천지역에서 실시된 2차례의 상륙작전을 분석하고, 상륙작전과 관련한 민간인의 피해를 분석하여 피해원인 및 재발방지책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연구범위를 6.25전쟁 시의 인천지역에서의 상륙작전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군사작전 특히 인천상륙작전 시 민간인 피해는 얼마나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왜 누구에 의해 발생하였는가? 둘째, 민간인 피해감소 및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과제를 설정한다. 첫째 과제는 인천지역에 상륙작전(1, 2차)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인피해는 얼마나 발생하였으며, 둘째, 민간인 피해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가해자는 누구인가? 셋째, 향후 전시 민간인의 피해감소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2.1.1 인천의 일반현황

인천항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국제무역항으로 서양의 근대문물을 받아들이는 관문이 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때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고 서울을 수복하기도 했다. 인천은 서해로 열린 서울의 길목이라는 지리적 역할로 수난이 끊이지 않았다(한국문화유산답사회, 2012: 123).

인천시의 특징은 고대부터 인천항이 발달되어 항뿐 아니라 조선소, 정미소 등

산업시설이 발달하였고 특히 한국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인천과 수도인 서울(노량진)과의 거리는 33km에 불과하였다. 인천해안의 특성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평균 7.5m의 간만의 차를 보이며, 인천항 앞에는 덕적도·영흥도·영종도·용유도·대부도·무의도 등 섬들이 방파제처럼 감싸고 있는 천연항구이다.

6.25전쟁 전후 인천의 인구는 1953년 간행된『인천시세일람』에 따르면 1952년 말 기준 총인구 256,751명(난민 포함 추정)으로 나타난다(인천광역시역사편찬위원회, 2003: 229).

2.1.2 상륙작전의 개념

연구목적상 상륙작전 시 민간인 피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상륙작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륙작전(上陸作戰, Amphibious Operation)이란 함정, 주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상륙작전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을 통하여 적 해안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공격작전으로 특성상 해군작전으로 분류된다(Joint Chief Of Staff, 2021: I-1; 해병대사령부, 2010). 상륙작전의 목적은 적 중심지역의 주요목표 공격 및 교란, 차후 전투작전수행, 해군 전진기지 또는 항공기지의 획득, 지역 또는 시설의 적 사용거부 등이다(Joint Chief Of Staff, 2021: II-1).

현대전에서의 상륙작전 역사를 보면 미국은 최초로 태평양전쟁에서 과달카날에서 상륙작전(1942.8.7.)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은 최초의 상륙작전으로 6.25전쟁 시 통영 상륙작전(1950.8.17.)을 실시하였다.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은 타라와 상륙작전, 이오지마 상륙작전, 오키나와 상륙작전을 실시하며 상륙작전 전술을 축적하였으며, 연합국의 승리를 이끈 노르망디상륙작전(1944.6.6.)은 군사전문가들의 뇌리에 '상륙작전'의 효용성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2.1.3 민사작전의 개념

전시 민간인 피해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개념은 '민사작전'이다. 민사작전(民事作戰, Civil Affairs Operations)이란 전·평시를 망라하여 군과 민간인의 상호관계 제반활동을 의미하나 이를 군사작전과 연관시켜 말할 때 민사작전이라고 한다. 또한 군이 주둔하거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군부대와 정부행정기관 및 주민간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제반활동을 민사작전이라 한다(이태규, 2012). 쉽게 설명하면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민사작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경우 민사작전에 대하여 관심을 갖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미군의 경우는 특수작전을 수행하며 민사작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부대를 편성하여 운영 중이다. 미 육군의 경우 민사심리작전사령부 예하에 총 8개의 민사여단(Civil Affairs Brigade)과 미 육군 제1특전사령부에 예하 민사작전부대로 제 95민사여단이 있다.

현재 한국군은 민사참모 조직이 사단급 이상부대에 소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나, 심리전작전과 분리된 민사작전 전문부대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6.25 전쟁 당시에 한국군 단독의 민사작전부대는 활동하지 않았다. 다만, 이라크전쟁 이후 미국의 요청에 의해 2004년 2월 자이툰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이 창설되고, 예하에 제11민사여단, 제 12민사여단이 창설되어 민사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라크 재건 임무 종료 후 자이툰사단 해체와 함께 해산되었다. 자이툰사단의 임무는 전후 이라크 아르빌주 지역의 농촌 재건, 치안유지 지원, 정보인프라 지원, 인도적 지원활동 등이었으며, 2008년 12월에 완전히 철수하였다.

2.2. 선행연구

본고에서 다룬 전쟁피해의 분류와 관련하여 Roberts(2010)는 전쟁에서의 민간인 피해 유형에 대해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 유형은 ① 전쟁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사망, ② 전쟁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부상, ③전쟁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전쟁 중 혹은 전후의 사망(질병, 무정부상태, 기타) ④ 일방적 폭력의 희생자(국가의 민간인 학살 등) ⑤ 전쟁으로 인한 성적 폭력, ⑥ 피난민, 실항민, ⑦ 전시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 그것이다(Roberts Adams, 2010: 115-136). 전쟁피해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피해의 판단에는 여러 복잡한 요소가 작용하므로 항상 민간인의 인적피해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 연구할 전쟁의 피해는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피해는 군인의 피해와 민간인의 피해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인의 인적피해는 피해형태에 따라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1차 피해로 사망, 부상이 있고 2차 피해는 생명에 간접적 피해를 주는 전재(戰災)피해와 피난이 있다. 사망의 하위 분류로 학살, 행방불명, 납치 등이 분류된다(공준환, 2015: 10-13). 본고에서는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1차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본고에서 피해의 일부로 자주 거론되는 학살과 폭격피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학살은 사전적 의미로 ‘가혹하게 마구 죽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대량살인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민간인 피해의 수는 커밍스와 할리

데이에 의하면 300~400만 명(남북한 포함)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브루스 커밍스, 존 할리데이(저), 차성수, 양동주(역), 1989: 203).

한국전쟁에서의 민간인 피해문제는 노근리 사건의 폭로와 함께 시작되어 이후 보도연맹원집단학살사건, 제주4·3학살사건 등 민간인 학살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시민단체, 유족단체 등에 의해 진상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인 집단학살문제에 접근해 1996년에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고, 2000년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다(서중석, 2010: 2-3). 주요 연구로는 정부가 생산한 전쟁 피해에 관한 자료들을 조사·분석한 것으로, 통계와 명부를 수집하고 분석한 연구로 정병준(2010)의 연구가 있으며,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살상 전반에 대한 연구로 김태우(2013), 양영조(2013)의 연구가 있다.

다음은 폭격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살펴본다. 폭격이란 사전적 의미로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려 적의 군대나 시설물, 또는 국토를 파괴하는 일’을 뜻하며, 폭격에 의한 피해는 주로 6.25전쟁 시 항공우세권을 장악한 유엔군의 공군기들에 의하여 가해진 민간인 피해로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해 발생하였다. 폭격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김태우의 한국전쟁기 미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라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2008)과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2013)이라는 저서에서 폭격관련 미군 정책과 폭격을 통한 피해를 사진과 자료기록으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로 본고에서 다룰 ‘6.25전쟁’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연구의 대부분은 안보적 측면, 군사전략·전술적 측면의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6.25전쟁을 안보, 군사적인 시각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연구를 찾아보았다. 대표적인 연구를 정리하면 배종호(2013)는 장사상륙작전과 학도의용군의 역사적 의미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기만한 장사상륙작전과 학도의용군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나상철(2020)은 한국전쟁기 UN군 한국노무단(KSC) 연구라는 논문에서 한국전쟁 중 동원된 노무인력의 형태와 운용 실태를 파악하면서, UN군의 한국노무단(KSC) 창설과 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조관행(2020)은 6.25전쟁, 극동공군 공수작전, 전쟁목표라는 논문에서 전쟁의 목표와 공수작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6.25전쟁의 사례분석을 통해 공수작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좀 더 폭을 좁혀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한 주요연구를 살펴보면 김광수(2010)

는 인천상륙작전과 북한군의 대응이라는 논문에서 인천상륙 작전 이전의 인천과 서울 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방어의 전모와 북한군 수뇌부의 전략판단, 인천상륙 이후 북한군 지도부의 작전적, 전략적 지도에 대해 조명하였으며, 유영옥(2010)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평가라는 논문에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전쟁사(戰爭史)적 의의를 연구하였다. 이상호, 박성진(2013)은 인천상륙작전과 팔미도 정보 작전이라는 연구에서 팔미도 정보작전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회고록 및 증언을 교차 분석하여, 팔미도 정보작전에는 한국인 자원자들의 희생과 클라크 첩보대의 작전이 기여했음을 밝혔다.

위의 연구사례처럼 6.25전쟁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려는 노력과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지만, 군사작전에 따른 민간인 피해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에 따른 민간인 피해와 관련한 국내 학술연구는 존재하지 않다. 다만 상륙작전 관련 해외 연구사례를 확인한 결과 Flint, Edward R (2009)은 박사학위논문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의 민간인 사상자는 상륙작전 전날부터 상륙작전 다음날까지의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6.25전쟁이 끝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이제부터라도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인의 전쟁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민간인 피해 관련 분야의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작전당시 해군작전경과보고서, 진실·화해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군본부 그리고 한국정부 자료, 미국 정부자료를 근간으로 밝혀지지 않은 비하를 발굴, 좀 더 실질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되는 결과를 산출하여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Ⅲ. 인천상륙작전(1, 2차)¹⁾

3.1. 인천상륙작전(1차) : 1950.9.15. ~ 16.

3.1.1 작전 배경

1950년 9월 전황은 전쟁 초기 주도권을 잡은 북한군의 주력은 대부분 적화

1) 6.25전쟁에서 인천지역 상륙작전은 1950년 9월과 1951년 2월 실시되었다. 1, 2차 상륙작전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구분하여 연구.

통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낙동강전선에 투입되어 있는 상황으로 한국군 입장에서는 낙동강전선만 무너지면 한반도가 적화되는 상황이었다. 북한군은 서울을 비롯한 후방지역에는 지역경비부대, 병참선 경비부대 위주의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인천지역은 월미도에 북한군 제226독립육전연대 제3대대 소속의 400여명과 제918해안포연대 예하부대가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인천시가지에는 제9사단 예하 제87연대가 8월 12일부터 인천지역방어임무를 맡고 있었고 월미도 제방으로부터 주안염전까지 해안방어는 제884군 예하 1개 대대가 방어하였다(국방군사연구소, 1995: 402). 당시 서울, 인천지역에서 활동중인 북한군은 약 10,000명으로 판단되고, 북한 해군은 5개 전대가 있었으나 인천상륙작전을 방해할 만한 능력은 되지 않고, 북한 공군도 성능이 낮은 소련제 항공기 19대를 보유하여 상륙작전을 저지할 능력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국방군사연구소, 1995: 403).

3.1.2 작전 경과

인천상륙작전은 본 작전 이전에 준비단계에서 소규모작전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는데, 민간인 피해는 월미도지역뿐 아니라 덕적도, 영흥도 등에서도 발생하였으므로 이전 준비작전(본 작전에 포함)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① 덕적도·영흥도 상륙작전(해군본부, 2012: 237-242).

북한군은 남침하면서 덕적도, 영흥도 등 연안 도서까지도 점령하였다. 덕적도, 영흥도 등은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해당하므로 인천상륙작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중요한 도서였다. 이에 한국 해군은 덕적군도를 탈환하기 위하여 상륙군을 편성하여 1950년 8월 18일 덕적군도에 대하여 상륙을 감행하여 탈환하였다. 이후 8월 20일에는 대이작도에 상륙하여 탈환하고 영흥도 또한 인천항을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었으므로 8월 20일 장근섭 중위를 포함한 90명으로 편성된 상륙중대를 상륙시켜 영흥도를 점령하였다.

② X-ray 작전(해군본부, 2012: 242-248)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은 8월 12일 미 극동군사령부로부터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정보수집명령을 받았다. 이에 한국해군은 정보장교 김순기 중위를 포함한 총 17명의 첩보대를 편성하고, 8월 18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영흥도에 상륙하여 첩보활동을 개시하였다. 첩보대는 영흥도를 거점으로 인천 시내에 잠입, 적정을 수집하여 미 극동군사령부 소속 클라크 대위에게 송신했다. 이들은 상륙작전 D-day 인 9월 15일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히는 임무를 수행하여 인천상륙작전 참가 함

선들의 항해를 유도하였다.

③ 월미도 폭격(이회환, 2009: 219-244)

미군과 한국군은 전세역전을 위해 인천상륙작전 상륙에 앞서 미군은 6월에서 8월 사이 인천의 곳곳을 폭격하였다. 이 폭격으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특히 폭격과 함포사격이 집중된 곳은 월미도로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시행된 위장 포격과 네이팜탄 폭격(이회환, 2009: 262)²⁾으로 월미도는 초토화되었고 그곳에 살던 80여 가구의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죽었다.

④ 인천상륙작전(1차)

1950년 9월 15일 실시된 작전은 미 제7함동기동부대(사령관 스트러블 중장)가 담당하였으며, 참가 함정세력은 미국 225척, 한국 15척 등 261척이었으며, 상륙군은 미 제10군단 예하에 미 해병 제1사단, 미 제7보병사단, 미 제1해병항공단, 한국 해병 제1연대, 한국 육군 제17연대 등 총 71,339명이 참가하였다. 상륙작전은 월미도 해안을 녹색해안으로, 만석동 해안을 적색해안으로, 인천 남부 해안을 청색해안으로, 인천 내항을 황색해안으로 각각 지정하여 9월 15일 아침 만조시간에 맞추어 실시되었고 16일 오후에 해안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종결되었다.

3.1.3 성과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역사적인 작전이었으며,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한 작전이었다. 인천에 상륙한 미 제10군단과 지상의 미 제8군에 의하여 북한군은 불과 2주일 만에 38선 이북으로 패주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이 아니었으면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을 시도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쟁 장기화는 물론 인천상륙작전보다 더 많은 병력손실과 국토의 황폐화를 초래했을 것이다.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약 13만 명의 아군 병력과 200만 여명의 민간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13만 여명의 적 포로를 획득하였다. 아울러 38선 이남 지역을 회복함으로써 남한 주민들은 10월 추수를 하게 되어 어려운 시기에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해군본부, 2012: 280).

3.2. 인천상륙작전(2차) : 1951. 2. 10 ~ 11.

2) 월미도 포격은 항공지원전대(TG 90.5)에서 출격한 케세어기 10대가 상륙해안에 폭탄, 로켓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 실시.

3.2.1 작전 배경

1951년 초 전황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진을 거듭하던 유엔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서울 이남지역까지 후퇴를 했고, 1951년 1월초 서울에서 철수한 유엔군은 1월 중순경에는 평택-원주-삼척을 잇는 선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재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중공군 개입 이후에도 유엔군은 해양우세권과 공중우세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해군은 진남포에서 인천에 이르는 해상에서 적의 기뢰부설에 대비한 강력한 봉쇄작전과 소해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해군본부, 2012: 393).

3.2.2 작전 경과

① YMS(Yard mine sweeper, 소해정)-510의 인천 기습상륙작전(해군본부, 2012: 394-397)

1951년 1월 5일 북한군과 중공군 각 1개 대대 700명의 병력이 인천시를 점거하였다. 당시 인천지역 해안봉쇄를 담당하는 한국군은 함덕창 대위가 지휘하는 YMS-510정이었다. 함대위는 1951년 1월에 인천항에 접근해 피란민 500명 구조와 적 범선 10척을 침몰시키는 등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에 미 제95기동부대사령관은 인천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위해 함대위에게 인천지역 적정 첩보수집을 지시하였고(해군본부, 2012: 403),³⁾ 1951년 1월 27일 YMS-510정은 인천항에 기습상륙하여 교전 끝에 적군 47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여 정보를 미군 측에 제공하였다.

② 2차 인천상륙작전(해군본부, 2001: 26-32)

1951년 2월초 연합군은 수원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공격 중이었으며, 이에 북한군은 서울로 후퇴 중이었고 인천시내의 북한군은 동요하고 있었다. 당시 인천항 봉쇄작전 중이던 한국 해군 701함장 노명호 소령과 덕적도 주둔 해병중대장 김종기 소령은 적정을 파악 후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키기로 하였다. 두 지휘관은 미 순양함 헬레나 함장과 회의를 통해 유엔군 함정의 함포지원 하에 2월 10일 덕적도 주둔 해병대를 상륙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조수문제와 덕적도 주둔

3) 제 95기동부대 사령관 스미스 소장은 당시 인천지역을 비롯한 몇 개 지역에 상륙기만작전을 계획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

해병대의 소집시간 지연으로 덕적도 주둔 해병대는 당일 상륙작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인천지역의 해군 함정에서 선발한 특공대 70명을 선발하여 인천기계 제작소 해안에 상륙을 개시하였다. 당시 월미도 지역에는 적군 약 800명이 방어 중이었으나 특공대 상륙을 대규모 상륙으로 오판하고, 부천 소사까지 진출한 지 상군에게 포위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속한 후퇴를 실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월 11일 오전 7시 덕적도로 부터 상륙한 해병대는 인천시를 재탈환하였다.

3.2.3 성과

인천 재탈환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천철수 후 군수지원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던 유엔군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인천항을 탈취당한 유엔군의 군수지원은 부산항 한 곳에 집중되어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터였기 때문이다.

소수의 병력으로 상륙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의 함포지원의 공이 큰데 북한군은 함포공격으로 인해 1950년 9월의 인천상륙작전의 공포가 되살아나 신속히 후퇴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IV. 인천상륙작전의 민간인 피해와 재발방지

4.1. 상륙작전 시 민간인 피해

4.1.1 상륙작전 시 민간인 피해 현황

1차 인천상륙작전을 전후로 인천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피해현황 분석결과 는 <표 4-1>과 같다. 민간인 피해관련 자료는 상륙작전을 1, 2차로 구분하고 각 차는 여건조성작전과 상륙작전 이후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또한 피해의 구분은 학살과 폭격피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피해를 보면 1950년 6월 25일 남침한 북한군은 7월 4일 인천을 점령하였고, 북한군의 진격이 임박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인천지역 보도연맹원을 모아 학살하였다. 미국 국립 문서기록관리청의 기록에 따르면 “1950년 6월 29일 인천에서 한국경찰이 400여 명 이상의 주민을 학살하였다”고 되어있다. 한편, 인천을 점령한 인민군은 군경 및 우익단체 15명을 학살하였다(이희환, 2009: 216-219).

유엔군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였으나 유엔군은 상륙에 앞서 6월에서 8월 사이 인천의 곳곳을 폭격하였다. 이 폭격으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유엔군의 포격과 네이팜탄 폭격으로 월미도는 초토화되었고 그곳에 살던 80여 가구의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죽었다(이희환, 2009: 219-220, 244). 인천상륙작전 후 9월 16일 한국 해병 제1연대는 시가지전투 중 인천경찰서에 도착하여 학살당한 시민들의 시체 100구를 확인하였다(국방군사연구소, 1995: 409).

1950년 8월 18일부터 9월 말경까지, 해군 육전대와 해군 첩보대가 덕적도와 영흥도를 정보수집의 근거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소 41명의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행정안전부 진실화해위원회, 2010: 477).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으로 한국전쟁의 전세는 역전되었고, 인천을 수복한 대한민국 해군은 부역자 색출을 명목으로 수십 명을 학살하였다(이희환 2009: 221-222). 또한, 1950년 10월 인천 앞바다에 강화도, 교동도, 김포 등지의 부역협박자와 가족, 월북협박자의 가족 약 200명을 학살하여 수장하기도 하였다(이희환, 2009: 235-236).

<표 4-1> 상륙작전 시 민간인 피해 분석결과4) (단위: 명)

구분	작전 / 지역		피해 계		
			학살	미군폭격 피해	계
1차 상륙	여건조성 작전 단계	덕적도 작전	18		18
		영흥도 작전	23		23
		X-ray 작전			
	상륙작전 이후 단계	월미도5)	3	10	13
		인천상륙작전(1950.9)	10		10
		기타(대부도)	6		6
2차 상륙	여건조성 작전 단계	YMS-510의 인천 기습상륙작전			
		상륙작전 이후 단계	인천상륙작전(1951.2)		
		기타(간석동)	17		17
계			77	10	87

4) 행정안전부 진실화해위원회(2010) 조사결과 전문을 분석하여 필자가 작성한 분석표임.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관련 피해 숫자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진술에 의해 다양한 경로로 집계되고 있어 정확하지 않음. 공격 조사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한 조사결과 는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진실화해위원회 결과가 유일한 공식자료임.

5) 1950년 6월 소월미도에서 발생한 피해는 민간인 피해는 제외한 숫자이며, 미군 폭격 피해 10명은 포함한 숫자임.

위에서 열거한 피해사례처럼 인천상륙작전(1차) 전·후 인천지역에서 희생된 민간인은 자료로 확인한 결과 덕적도·영흥도 100~150명, 인천 400~1,800명으로 추산되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2010년 조사보고서에서는 덕적도·영흥도 41명, 인천 52명, 강화군 교동면 1명 등 최소 94명의 희생사실만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행정안전부 진실화해위원회, 2010: 508-509). 한편, 언론에서는 덕적도, 영흥도에서 상륙작전 전에 100~150명의 학살이 이루어졌고, 상륙작전 후 인천 지역에서 400~800명의 학살이 이루어졌으며 월미도에서 폭격으로 100명이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였다(한겨레신문, 2016).

2차 인천상륙작전의 민간인 피해를 별도로 분석해 보았다. 2차 인천상륙작전은 1951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시기의 인천지역 민간인 피해는 육군 제1사단 중위 한○○가 자신의 부친 한 (韓, 48세)이 지방파악들에 의해 피해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부대가 간석동 인근에 주둔하던 1951년 2월 12일 인천 간석동에 도착하여 신현수(申鉉洙)의 가족 17명을 살해한 데 이어 하형홍(河亨泓)의 처와 박장원의 가족 5명도 살해하였다는 조사결과가 있다(행정안전부 진실화해위원회, 2010: 526-527). 이 시기를 전·후한 민간인 피해 사례는 위의 건 이외 보고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4.1.2 상륙작전 시 민간인 피해발생 이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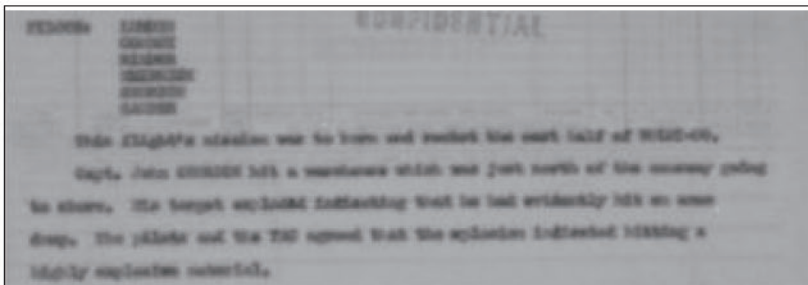
인천지역에서 민간인 피해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에 대한 분석을 요약하면 인천지역에 군이 상륙작전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천항의 길목에 위치한 덕적도, 영흥도, 월미도 지역의 주민은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민간인 피해의 원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사례별로 분석해 본다. 첫째, 상륙작전 전후 특히 상륙작전 전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상륙작전 시 발생하는 민간인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앞에서 살펴본 상륙작전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상륙작전은 다양한 부대를 모아 작전해야 하므로 계획수립과 시행이 매우 복잡하다. 더욱이 상륙작전이 어려운 것은 기상, 해상상태, 수로조건 등에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특히 ‘아무런 기반이 없는 적 지역’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다.

상륙작전의 특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륙작전은 타 작전과는 달리 적 지역의 일정 장소에 상륙하는 것이며, 주위에 우군은 없다. 따라서 민간인이 우

군이러는 신뢰감이 없거나 우군에게 친하지 않은 과거의 행적이나 행동은 우군에게 해를 끼칠 것이란 판단을 하게 되어 작전지역의 민간인에게 피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와 사례와 같이 북한 고위층 인사인 이승엽의 가족, 부역혐의자 등은 상륙작전 시 우군에 막대한 타격을 줄 이적행위가 예상되므로 사전조치차원의 피해를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1950년 9월 10일 월미도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되었다. 항공폭격은 미 해병대 항공단 제15항공모전단 소속의 해병항공기들(VMF-214, 323)이 95개의 네이팜탄을 투하와 기총소사를 실시하여, 조사에 의하면 민간인 10명이 희생되었으나 실제 희생자는 100여 명으로 추산된다.⁶⁾ 이 희생사건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미 해병대 상륙작전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천상륙작전의 교과서격인 미군의 타라와상륙작전 사례를 살펴본다. 타라와 상륙작전 전 작전회의에서 지원부대 사령관 하워드 킹맨 소장은 이렇게 소리쳤다. "We do not intend to neutralize [the island], we do not intend to destroy it," boasted one admiral, "Gentlemen, we will obliterate it" ("우리는 이 섬을 무력화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파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섬을 지워버릴 것입니다.")(Alexander, 2003: 6-7). 타라와상륙작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군은 상륙작전 개시 전 상륙예상지역에 막대한 폭격을 실시함으로써 아군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림 4-1> 미군기 폭격 보고서(1950.9.10)

출처 : NARA, RG 313, ENTRY-Commander, *Marine Aircraft Group (MAG-33), Operational & Historical Records, 1943-1953, BOX:58, - VMF-214 9/10/50 07:00 AIR ATTACK REPORT. page 2.*

6) 행정안전부 진실화해위원회. 위의 보고서(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11. 확인 피해자 10명, 미 확인 피해자 8명.

<그림 4-1>의 미군기 폭격 보고서(1950.9.10)에 의하면 미군의 항공폭격 임무는 월미도 동쪽 지역을 전소시키기 위한 폭탄투하 및 로켓공격이었다. 인천 상륙작전 전까지 미 합참이 반대했던 이유는 작전성공의 불확실성 때문이었는데, 그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가 월미도였다. 미군은 이오지마 상륙작전의 경험⁷⁾을 반추하면서 목표지역(인천)에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작전개념을 수립했을 것이다(행정안전부 진실화해위원회, 2010: 47-48). 작전 지휘관들은 월미도에 대한 폭격이 불가피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월미도 무력화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민간인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제인도법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다(행정안전부 진실화해위원회, 2010: 70).

셋째, 덕적도·영흥도 지역에서 민간인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해병대 상륙작전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륙작전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전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륙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적보다 상대적으로 전력우세의 유지가 필요하며, 시간적·공간적 기습달성이 필요하다. 특히 상륙작전성공을 위해서는 초기단계의 취약으로 인한 여건조성작전이 매우 중요하다(Joint Chief Of Staff, 2021: I-4)

여건조성작전이란 상륙작전 이전에 실시하는 작전으로 돌격전작전(H/L시 이전 장애물제거, 정찰, 감시 등), 선견부대작전(본대 도착이전 수로정찰, 정찰/감시, 표적파괴 등), 지원 작전 그리고 보조상륙 등이 이에 속한다(Joint Chief Of Staff, 2021: I-6). 상륙작전에 있어 여건조성작전은 본 작전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작전이다. 따라서 여건조성작전에 참가하는 대원들은 적지에 상륙을 실시해야 하는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영흥도 사례의 경우 남로당 2인자 이승엽의 가족들은 작전상 큰 불확실성 요소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본고에서 파악한 상륙작전 시 발생한 민간인 피해현황은 피해자, 목격자, 유족 등의 증언을 통한 자료이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표 4-1>의 자료를 생성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천상륙작전에 따른 덕적도, 영흥도의 군경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와 소월미도, 팔미도 등지의 피해자는 ‘학살’로 규정되었다(행정안전부 진실화해위원회, 2010: 477).⁸⁾

7) 1945년 2월 19일, 70여 일간의 준비포격 끝에 미군 8만여 명이 이오지마에 상륙한다. 2만여 명의 일본군들은 쉽게 섬을 내주지 않고 일본군은 극소수의 생존자를 제외한 모두가 전사했으며, 미 해병대도 전사 6,821명, 부상 20,865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8) 규정근거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을 중대

추가적으로 1차 상륙작전 시기와 비교하여 2차 상륙작전 시기의 피해가 적은 원인을 분석하면 첫째, 2차 인천상륙은 비교적 소규모 작전으로 작전준비 및 시행 기간이 짧아 그만큼 민간인 피해도 적었다. 둘째, 1차 인천상륙작전 전·후에 민간인들의 직·간접적으로 친·인척 피해를 경험해 본 민간인들의 피난이 이루어져 피해가 적었다. 셋째, 1차 인천상륙작전 시 전쟁범죄를 범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 군인·경찰들의 경각심 고취로 민간인 피해가 감소하였다(육군검찰부, 1951: 1712-1722)⁹⁾고 분석된다.

한편 상륙작전 이전인 여건조성작전 단계와 상륙작전 이후의 민간인 피해현황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여건조성단계에서의 민간인 피해가 상륙작전이후 단계에 비해 155%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 원인은 여건조성단계에서의 작전참가 부대원들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상륙작전 이후보다 크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분석되며, 상륙을 실시한 이후에는 적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전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민간인의 피해는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4.1.3 민간인 피해발생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인천상륙작전 전·후 발생한 민간인 피해 현황 중 2010년 행정안전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확인된 피해를 분석해 보았으며 결과는 <표 4-2>와 같다.

하계 침해한 위법행위로 규정.

9) 육군중위 한○○에 의한 집단살해사건은 단기 4283년 12월 23일 특명갑 제76호에 의하여 설치된 보병 제1사단 고등군법회의에서 한○○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4284년 2월 25일 사형을 선고.

<표 4-2> 상륙작전 시 민간인피해 가해자별 분석결과¹⁰⁾ (단위: 명)

구분	작전		규명신청자			조사과정 확인			계
			군	경	치안대	군	경	치안대	
1차 상륙	여진조성 작전 단계	덕적도 작전	4			14			18
		영흥도 작전	1			22			23
		X-ray 작전							
		월미도	10				3		13
	상륙작전 이후 단계	인천상륙작전(1950.9)	2	5			2	1	10
		기타(대부도)					6		6
2차 상륙	여진조성 작전 단계	YMS-510의 인천 기습상륙작전							
	상륙작전 이후 단계	인천상륙작전(1951.2)							
		기타(간석동)	17						17
계			34	5		36	11	1	87

민간인 피해에 대한 가해자별 분석결과 1차 상륙작전을 전후로 발생한 피해는 군인 17명(미군폭격 피해 10명 포함), 경찰 6명이었으나 조사 중 추가로 확인된 결과는 군인 39명, 경찰 13명, 치안대 3명이었다. 2차 상륙작전을 전후로 한 피해는 피해규명 신청대상자 피해 중 군인에 의한 피해자가 17명이었다. <표 4-2>에서 보듯이 가해자별 구분으로는 한국 군인(해군, 해병대, 육군)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으며, 경찰, 미군, 치안대 순이었다. 원인은 상륙작전 특성상 해군주관의 작전이므로 작전지역내에서 민간인 접촉이 가장 많은 해군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 된다

한편 학살과 폭격에 의한 피해를 비교해 보면 <표 4-1>에서 보듯이 학살 피해 77명, 폭격 피해 10명으로 확인된다. 이 결과를 보면 학살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폭격으로 인한 피해보다 7배 넘게 많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 시 미군 폭격에 의한 피해자는 행정안전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에서 확인자 10명, 미확인 피해자 8명이었으나, 기록상 당시 월미도에 80여 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10) 행정안전부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조사결과를 근거로 상륙작전 관련 민간인 피해현황을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표임. 현재 위원회의 2차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전시 민간인 피해관련 유일한 공식자료임.

보이는 바 실제 피해자는 100명 이상으로 추정됨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차 상륙작전시 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전무한 것은 1차 상륙작전의 주체가 미군이었음에 반해 2차 상륙작전의 주체는 항공폭격 전력인 전무한 한국군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2. 상륙작전 시 민간인 피해 재발방지책

4.2.1 전시 정부의 책임과 역할 정립

자국민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다. 전시에 민간인의 피해는 정부의 정상 기능 상실 또는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봐야 한다. 전시에 군사작전으로 발생하는 민간인의 피해를 완전히 막기에는 여건상 제한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무능과 무지와 통제력 부족으로 민간인들을 방치하여 민간인들 간의 이념갈등으로 상호간 피해가 발생하고, 또한 개인감정에 의해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하여 정부는 책임이 가법지 않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자료 및 증언에 의하면, 심지어 정부의 지시에 의해 민간인 피해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확인되고 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179).¹¹⁾ 정부의 잘못뿐 아니라 특히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 경찰 등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그리고 피해감소와 재발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대로 국가는 훈련 시에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시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군은 전시 수복지역에서의 안정화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국방일보, 2021).¹²⁾ 전쟁으로 북한지역에서의 작전 시 북한지역주민을 어떻게 대할지의

11) 1950년 12월 18일 대통령 이승만은 좌익재판과 형 집행을 서두르라고 명령한 사실을 AP 통신은 보도하고 있다.

12) 육군 21사단은 2017. 10. 11~18일 사단 작전지역에서 안정화 작전 실제훈련을 펼치며 작전투입 시 행동요령을 숙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정화 작전은 전시 수복지역에서 정부의 통치질서를 확립할 때까지 수행되는 제반 작전활동이다.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문제는 한·미연합작전 시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미군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38선 이북에서의 작전 시 민간인 학살 및 대량피해 등 큰 문제를 불러 올 것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4.2.2 과거사 진실규명과 신상필벌

전시 민간인에 대한 피해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에 발생했던 역사를 명확히 규명하여야 한다. 과거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과거사정리법’이 2005년 5월에 통과되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1기/정식명칭)가 같은 해 12월 출범하여 2010년까지 활동하였다. 그러나 정식조사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유해가 발견되고 있어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¹³⁾ 과거의 민간인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한 반성이 필요하다.

전시에 민간인 피해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더불어 신상필벌이 중요하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법적 차원에서 처벌도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군사작전에서는 작전을 지휘하는 군 지휘관의 의도가 중요하다. 6.25전쟁 시 손원일 해군총장은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에게 “포로와 부역자는 절대로 죽이지 마라. 북한군에 협력한 부역자들도 반드시 경찰에 넘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된 이후 한국해병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해군본부, 2012: 272)는 기록에서 보듯이 군사작전 시 지휘관의 강력한 의지로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한성훈, 2005: 19-20).¹⁴⁾

4.2.3 전쟁 관련 제반 법교육 강화

국가는 전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육군 21사단은 2017. 10. 11~18일 사단 작전지역에서 안정화 작전 실제훈련을 펼치며 작전투입 시 행동요령을 숙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정화 작전은 전시 수복지역에서 정부의 통치질서를 확립할 때까지 수행되는 제반 작전활동이다.

13) 행정안전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2기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2020.12.10. ~ 2022.12.9.)

14) 전장에서 병사들은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에 대하여도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며 상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로만 여겨 죄의식 없이 ‘복종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지휘관의 명령은 부하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법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등 전시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중학생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민간인 피해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민간인을 상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전시를 대비하여 전투원 및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고통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전시국제법(전쟁법)(임덕규, 2000: 190)¹⁵⁾을 반드시 교육하여 군사적 필요의 원칙, 분별의 원칙, 인도주의 원칙 등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 시는 국가적 차원과 국제사회적 차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분쟁의 형태와 전쟁관이 변화함에 따라 대응하여 재편성·체계화된 국제인도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국제인도법은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무력분쟁의 전략적·전술적 조건을 규제하고 개인의 보호와 존엄의 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제법규의 총칭(이장희, 2014: 51-53)¹⁶⁾으로 전시에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인권관련 법률교육, 평화·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전시에 직접 무력을 행사하는 군·경찰을 대상으로는 군법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간부들 대상으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에 군법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작전부대에는 전시 군 법무참모 편성을 증가하여 작전 시 작전지휘관에게 법률적인 참모조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육군본부, 1988: 38).¹⁷⁾ 이로써 전시 군·경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

4.2.4 대민작전을 고려한 군 조직 보강

앞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군사작전에서 민간인과 관련한 임무를 전

15) 전시국제법의 주요 적용대상으로는 1907년의 “헤이그 협약”과 1949년의 “제네바 협약”이라고 볼 수 있다.

16) 국제인도법은 제네바법과 헤이그 법으로 이루어진다. 제네바 법은 무력충돌 시에 교전자와 민간인을 포함하여 전쟁희생자를 피아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고, 헤이그 법은 적대수단과 방법을 규율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줄임으로써 인도주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법이다.

17) 6.25전쟁 시 군이 행한 ‘직결처분권’은 1950년 7월 25일 총참모장 정일권의 이름으로 공포된 작전훈령 제12호로, 민간인 살해와 처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잘못 적용되었다. 1951년 7월 10일 ‘직결처분권’은 헌법과 합헌적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는 행정조치로 그 위법성이 문제되어 폐지되었다.

문적으로 수행하는 부대가 민사부대다. 한국군의 민사부대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군의 예를 들어 알아본다. 미군 민사작전 부대의 임무는 현재 활동 중인 민사부대인 제95민사여단의 임무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 부대는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연합군이 일본에 상륙 후 전시체제를 평시체제로 전환시키는 임무와 군정임무를 수행했고, 한국에도 파견되어 한국 군정업무를 지원하였다. 이후 주로 전시의 민간인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며 군사작전을 지원하였다(美 제95민사여단 홈페이지, 2021).

미군 민사작전부대의 편성은 일괄적이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개 민사사령부 예하에 2개 민사여단이 편성되며, 1개 민사여단 예하에는 4~5개의 민사대대가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제95민사여단 예하에는 제97민사대대(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이 편성되어 대대급 부대가 지역사령부를 지원한다(美 제95민사여단 홈페이지, 2021).

한국군도 평시에 합참 또는 특수전사령부 예하에 대대급 수준의 민사대대를 편성하여 평시부터 임무수행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중대급 부대를 가만 운용하다가 전시에 확대편성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복지역 안정화작전에 투입되는 부대의 임무수행을 지원토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상륙지역에 대한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작전 임무를 전담하는 부대를 사단급 부대에 편성(연대상륙단 배속)하여 상륙작전 시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군은 이라크에 민사부대인 자이툰부대(2004.2 ~ 2008.12)를 파병한 경험 이 있다. 자이툰부대는 대민 친화활동을 통해 책임지역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전후복구 및 민주화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이라크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이라크 임시정부 지원, 이라크 군·경 치안 유지 활동지원, 적대세력 공격 시 방어적 조치 등을 펼쳤으며(김순태, 2008: 183-184), 자이툰 부대의 민사작전은 도로, 수도 전기 개설 등 주민들의 애로를 찾아 해결해주는 ‘그린 엔젤작전’을 전개하여 이라크내 다국적군의 모범이 되었으며, 미군도 자이툰부대의 민사작전을 벤치마킹하였다(국방일보, 2021). 이러한 민사작전으로 한국군의 참전에 대한 보복공격을 협박했던 이라크전에서 미군은 약 8,000명의 피해를 입는데 비해 한국군은 1명(자살)의 피해만 발생하였다. 한국군은 전장에서 의 대민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작전경험이 있는 장병들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한 부대를 편성하여 민사작전 시 민간인 피해예방조치를 선도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하게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¹⁸⁾

또한 전시 민간인 피해는 주로 법을 모르거나 법을 무시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참모인 법무참모 조직을 보강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군의 사단급 부대에 편성된 법무참모실을 전시에는 연대급 부대에 까지 편성하여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군 조직에 군종참모 조직을 보강하여야 한다. 군종참모의 기능은 신앙을 통한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정신전력의 강화이다. 하지만 군종참모는 장병들의 사기진작뿐 아니라 멘토활동을 통한 전장에서의 정신적인 안정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현재 연대급에 편제된 군종참모를 전시에는 대대급까지 편제하여 전투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V. 결 론

대한민국은 해방 후 4년여 간 정치적 혼란을 겪다가 6.25전쟁을 맞게 되었다. 전쟁 초 6.25전쟁의 상황은 한반도 공산화 직전이었다. 이 시기에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전환점이 된 역사적 작전이 '인천상륙작전'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는 유엔군이 인천상륙을 통해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하는 효과와 낙동강방어선에서 유엔군의 반격의 계기를 조성해 주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쟁으로 인한 피아간의 막대한 인명손실이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민간인의 피해가 사망 24만 4천여 명, 학살 12만 8천여 명, 부상 22만 9천여 명, 납치 8만 4천여 명, 행불 30여만 명 등 총 99만여 명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6.25전쟁 시 인천지역에서 실시된 2차례의 상륙작전을 분석하고, 상륙작전과 관련한 민간인 피해를 분석하여 피해원인 및 재발방지책을 찾고자 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연구과제를 정하였는데, 첫 번째 연구과제는 인천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인피해는 얼마나 발생하였으며, 둘째, 민간인 피해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가해자는 누구

18) 자이툰 부대 근무경험이 있는 장병 중 간부(장교, 부사관 등은 30년 이상 근무)를 기간 직원으로 대민작전 전문 민사부대를 감소편성으로 운영하여 평시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유사시 이 부대를 기반으로 민사부대를 확대 편성, 투입, 대민작전 경험이 남아있는 간부들의 전문성을 전수하여 효율적인 민사작전 수행.

인가? 셋째, 향후 민간인 피해 감소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고 접근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 번째 연구과제인 인천지역에 상륙작전(1, 2차)을 실시에 따른 민간인피해는 얼마나 발생하였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 인천상륙작전(1차) 전·후 인천지역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수는 덕적도·영흥도 41명, 인천 52명, 강화군 교동면 1명 등 최소 94명의 희생사실만 확인 또는 추정된다. 2차 인천상륙작전 전·후 인천지역 민간인 피해는 육군중위 한○○의 민간인 22명을 살해하였다는 조사결과를 찾을 수 있었으며, 위의 건 이외 보고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둘째, 상륙작전 시 민간인 피해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가해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먼저, 민간인 피해발생 원인은 ① 상륙작전 투입부대원에게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곳은 적지이며, 기본적으로 작전지역 주변의 민간인도 모두가 적성주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작전보장을 위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이다. ② 미군은 이오지마 상륙작전의 경험을 반추하여 목표지역(인천)에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월미도지역에 대한 무차별 함포 및 항공공격을 가하였다고 분석된다. ③ 상륙작전에 있어 여건조성작전은 본 작전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작전이다. 따라서 여건조성작전 부대원들은 작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 덕적도·영흥도 지역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민간인 피해에 대한 가해자별 분석결과 1차 상륙작전을 전·후로 한 피해는 피해규명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확인 된 바로 군인 17명(미군폭격 피해 10명 포함), 경찰 6명이었으나, 조사 중 추가로 확인된 결과는 군인 39명, 경찰 13명, 치안대 3명이었다. 2차 상륙작전을 전후로 한 피해는 피해규명 신청대상자 피해 중 군인에 의한 피해자만 17명이었다.

셋째, 향후 민간인 피해 감소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① 정부는 민간인 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전시기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 시 민간인에 대한 피해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진실규명을 통한 진솔한 반성이 필요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신상필벌이 중요하다. ③ 국가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등 전시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한국군도 수복지역 안정화작전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민사부대를 편성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적지역의 민간인과 접촉이 많은 상륙작전 시에는 민사작전 전담부대를 편성하여

민간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6.25전쟁 시 인천지역 상륙작전에 따른 민간인 피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군사작전은 한반도 어느 지역에서든 실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히 강구해야 과거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6.25전쟁 시 민간인피해 관련 인천이라는 일정지역의 상륙작전이라는 특정작전에 대한 연구결과일 뿐이다. 본고는 인천상륙작전 시 발생한 민간인 피해현황의 모드를 명확히 밝히고 완벽한 피해재발방지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피해현황을 바탕으로 피해방지대책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 결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유가족들의 피해의 상처가 치유되고 민간인피해의 재발이 완벽히 방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전시 민간인피해 관련 재발방지대책 뿐 아니라 전쟁과 인권관련 문제 등 전쟁과 관련한 제 분야에서 연구가 계속되어 전쟁의 실상을 밝힘으로써 전쟁을 방지하는 과업에 기여되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공준환. (2015). 한국전쟁기 민간인 피해의 사회학적 연구 : 통계생산의 정치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국방군사연구소. (1995). 한국전쟁(상). 국방군사연구소.
- _____. (1996). 한국전쟁(중). 국방군사연구소.
- _____. (1996). 한국전쟁피해통계집. 국방군사연구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한국전쟁자료총서 53: 미 국무부 한국국내현황관련 문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김광수. (2010). 인천상륙작전과 북한군의 대응.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군사연구, 130, pp.169-120.
- 김순태. (2008). 군사논단, 53, pp.183-184.
- 김태우. (2008). 한국전쟁기 미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3).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 창비
- 나상철. (2020). 한국전쟁기 UN군 한국군노무단(KSC)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내무부 통계국. (1955). 대한민국 통계연감. 내무부 통계국. pp.212-213.
- 배종호. (2013). 6.25전쟁 시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재검토. 공주대학교 안보과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중석. (2010).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학살의 연구 방향. 사림, 36, pp.2-3
- 양영조. (2005). 6.25 전쟁사(3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_____. (2013). 북한의 남한 점령기 민간인 학살 : 한국정부와 미군(KWC) 조사기록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46, pp.59-96.
- 유영욱. (2010).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평가. 한국보훈논총, 9(2), pp.17-20.
- 이상호·박성진. (2013). 인천상륙작전과 팔미도 정보작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132, pp.287-311.
- 이장희. (2014). 국제인도법 이행의 미래에 대한 국제법적 전망. 인도법 논총 제34호.
- 이태규. (2012). 군사용어사전. 일월서각.
- 이희환. (2008). 인천아 너는 엇더한 도시?. 역락.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3). 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
- 임덕규. (2000). 6.25의 법적 조명. 6.25전쟁과 전시국제법의 적용실태, 서울대학교 법학, 41(2).
- 정병준. (2010). 한국전쟁기 남한 민간인 인명피해 조사의 유형과 특징: 한국정부의 통계·명부를 중심으로.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pp.471-504.
- 조관행. (2020). 6.25전쟁에서 유엔공군의 공수작전 운영과 성과: 극동공군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27(3), pp.98-134.
- 차성수, 양동주. (1989).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태암.
- 승리로 가는 첫 걸음 '안정화 작전' 무결점.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71024/1/BBSMSTR_000000010023/view.do. (국방일보, 2017.10.24.)
- 인천상륙작전 미군폭격에 희생 월미도 주민 위령비 세운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movie/756485.html>. (한겨레신문, 2016.08.12.)
- 인천상륙작전 때 민간인 학살 있었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movie/756485.html>. (한겨레신문, 2016.08.12.)

전쟁 폐허 위에 자립의 뿌리 내리고 글썫 피워내다.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10729/1/BBSMSTR_000000100138/view.do. (국방일보, 2021.07.28.)

한국문화유산답사회. (2012). 답사여행의 길잡이7. 경기남부와 남한강. 서울: 돌베개.

한성훈. (2005). 한국전쟁시기 거창학살 사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해군본부. (1976). 해전사. 해군본부.

_____. (2001). 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 해군본부.

_____. (2012).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해군역사기록단.

해병대사령부. (2010). 해병대 운용교범 3-1-1: 상륙작전. 해병대사령부.

행정안전부 진실화해위원회. (201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서울·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서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진실화해위원회. (2010).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서울: 행정안전부.

Colonel J. H. A. (2003). Across the reef: The marine assault of Tarawa. Washington D.C. : Marine Corps Historical Center HyperWar Foundation.

Flint, E. R. (2009). The development of British civil affairs and its employment in the British sector of allied military operations during the battle of Normandy, June to August 1944 (Ph.D. thesis). Cranfield, Bedford: Cranfield University; Cranfield Defence and Security School, Department of Applied Science, Security and Resilience, Security and Resilience Group. OCLC 757064836

JOINT CHIEF OF STAFF. (2018). Joint publication 3-57 Civil-Military Operations. Washington D.C. : JOINT DOCTRINE PUBLICATIONS.

JOINT CHIEF OF STAFF. (2021). Joint publication 3-02 Amphibious Operations. Washington D.C. : JOINT DOCTRINE PUBLICATIONS.

NARA. RG 313, ENTRY-Commander, Marine Aircraft Group(MAG-33), Operational & Historical Records, pp.1943-1953, BOX:58.

Roberts A. (2010). Lives and Statistics : Are 90% War Victims are Civilian?. Survival, 52(3), pp.115-136.

美 제95민사여단 홈페이지. <https://www.usar.army.mil/USACAPOC>. 검색일:

2021.2.9.

美 육군 민사심리전사령부 홈페이지. <https://www.usar.army.mil/USACAPOC>.

검색일: 2021.2.9.

A Study on Military Operations and Civilian Damage: Focusing on civilian damage caused by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Won-Kyu Youn (Yeoju University/Professor/wkyoon1@hanmail.net)

Abstract

- Research topics: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is an operation that revived the Korean military in the event of a communist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Korean War. Until now, attention has been neglected on the damage to civilians caused by the landing operation, focusing on the performance of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Therefore, this paper conducted a study on the status of civilian damage and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due to military operations, focusing on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 Research background: Historically, the achievements and significance of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are great in modern history. In addition to reflecting on the negligence of civilians' damage due to the performance of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so far, we tried to analyze the two landing operations conducted in Incheon during the Korean War and find the cause of damage and recurrence prevention measures.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Many investigations an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o far on civilian damage that occurred during the Korean War. However, there is no research on civilian damage related to a specific military operation in a region called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and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Although the results of this paper did not fully reveal all of the civilian damage

status and suggest measure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damage, it is the first attempt to study civilian damage and prevent it during the landing operation.

- Research method: Based on military data related to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and the results of a reliable investigation agency related to civilian damage, the damage status was synthesized and analyzed, and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of civilian damage were studied.
-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prevent recurrence of damage in relation to civilian damage during the war, the state needs sincere reflection through finding the truth about the damage, and personal punishment for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s important.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public officials performing government affairs, laws an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or soldiers, police, and public officials, and civil units specializing in civilian operations should be organized from peacetime.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Although not all of the civilian damage caused during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was revealed, damage prevention measur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officially revealed damage status so far. As a first step in this study, we hope that many studies and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will come out related to civilian damage during the war.

Key Words: War, Korean War, Incheon, Incheon Landing Operation, Civil Operation, Civil Damage, Human Rights.

논문제출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
2021년 04월 30일	2021년 08월 26일	2021년 08월 30일
저자 이메일	wkyoon1@hanmail.net	

본 논문은 타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서 현재 다른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 명시합니다.